

잇단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도로공사는 '나 몰라라' 뒷짐

“고속도로는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사고의 위험성은 나 몰라라 하고, 물질적 보상에만 급급하니 운전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

최근 무안광주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및 2차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현장 관리와 책임에 대해 일관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원 이모(36·여)씨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아찔한 사고를 겪을 뻔 해서 진땀을 뺐다.

지난 14일 오전 11시15분께 광주에서 목포를 향해 무안광주고속도로를 SM3 승용차로 주행하던 중 합류유계소를 1km 앞둔 지점에서 ‘뒹’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무엇인가에 부딪힌 충격이 차내에서도 느껴졌기 때문이다.

500여m를 더 주행하다가 2차로 옆 갓길에 잠시 차를 정차하고 살펴보니 차량이 파손된 상태였다.

이 물체는 가로 40cm·세로 30cm 가량의 화물차의 뒷바퀴를 고정하기 위한 철제 물품이었다. 도로의 한 가운데에 떨어져 있었고, 이 물체를 비켜가려던 이씨의 차량은 심각하게 하부가 찢겨 결국 폐차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더 답답스러웠던 것은 고속도로에서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곧바로 신고조치를 했지만, 관계기관은 ‘낙하물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씨는 사고 발생 직후 오전 11시26분께 도로공사 측에 신고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니, 보험사 통해 이야기하시라’는 통명스런 답변이었다. 교통사고 대응 매뉴얼(?) 대로 ‘보험’만 운운할 뿐이었다.

결국 뒤따라 오는 차량들이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씨와 동승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철제 물품을 갓길에 치워놓아야 했다.

이씨는 출장지인 목포에 도착해서야 사고 접수를 하고자하는 마음에 오후 12시7분께 목포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답변 역시 “현장에 출동해서 즉시 발견되지 않는 한 인력을 투입해가면서까지 낙하물을 치울 수는 없다. 이런 일

“인명피해 없으니, 보험통해 처리하라” 미온적 태도 경찰도 “현장 출동·관리 어렵다”...피해자만 ‘분통’

로 신고하지 말라’였다. 이튿날 고속도로 순찰대에 문의 전화를 했으나 비슷한 답변이었다.

이씨의 차량을 파손시킨 낙하물에는 ‘합평중형’이라는 글씨와 제조사가 버섯이 적혀 분명한 증거물인데도 이에 대한 추적과 처벌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공사와 경찰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씨는 “생활경범죄 부분의 경우 관련 기관 협조를 얻어 CCTV를 돌려서 몇날 며칠이 걸려서라도 범인을 잡아내지만, 오히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에 대해서



무안광주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는 심각할 정도로 무관심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9일 새벽에는 순천시 서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교통사고 후돌로 수박운반기가 떨어져 이를 옮기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숨진 사고도 발생했다. 낙하물로 인한 직접적인 추돌 외에 2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이 책임을 회피하면, 피해자가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기간도 평균 6개월 이상으로 길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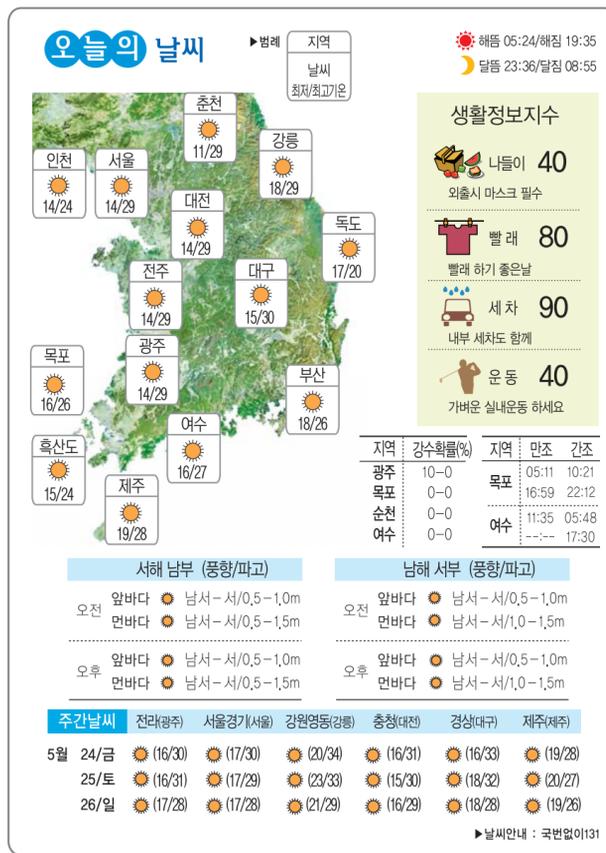
사정이 이러하니, 고속도로 구간 내 낙하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 운행 시 적재 불량차량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편중적재, 적재할 개방, 스페어타이어 고정 불량, 결속상태 불량, 타이어상태 불량, 적재할 청소상태 불량 차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차량부착물 관리 소홀, 뒷게 미설치차량, 견인 시 사고차량 파손품 낙하 등 총 10종류의 유형이다.

또한 노면에 잡물 낙하 시 단속 및 처벌법규는 고속국도법 제11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고속국도법 제12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이에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정기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고속도로 각 톨게이트와 주요 취약지점에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과적 및 적재 불량 차량이 여전히 상용이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나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순찰차가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도착하고 있다”며 “현장 확인과 피해자 보상에 대한 조치가 마땅하나 일일이 낙하물에 대한 처벌조치와 적벌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오승지기자



재난안전분야 선도사업 동구, 행안부 공모 선정

광주 동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7억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동구가 이번에 선정된 ‘내민보도 조성사업’은 관내 횡단보도 주변에 보도를 확장하는 ‘내민보도(Curb Extension)’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동구는 운전자 주의가 분산되는 교차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안전공간을 확보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는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연말까지 시설설계를 추진,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선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2일 오전 북구 신안동 주택가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상승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동시 영치 날’을 맞아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광주북구청 제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절 남구, 과태료 처분 등 ‘숨방망이 처벌’

광주시 남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 등을 하지 않고 사무실 비품 등을 구입해 지자체 감사에 적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지만 숨방망이 처벌 아니냐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남구는 22일 노대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돼 2건에 대해 각 200만원씩 과태료 부과, 2건에 대해 주의조치 했다.

A아파트에 대한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는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남구에 정식적인 감사 의뢰를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지난해 10월 관리사무소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구는 “관리사무소 비품 등을 구입할 경우 계약에는 ‘급급 사안’으로 명시돼 있다”며 “수대의 컴퓨터가 있어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직원의 PC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철원기자

또 같은해 3월 미화·경비업체 선정의 결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한 사례와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과 지붕·벽면 누수공사를 한 뒤 비용 등을 관리비 내역에 포기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비대위가 제기한 횡령 등의 의혹은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며 “이달 말까지 소명을 들어 본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면서 “연임과 관련해 제재할 어떤 법적 제도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남구는 법적인 제도 아래 연임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실상 숨방망이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로 흐지부지 하는 것 같아 유감이다”고 말했다. /문철원기자

이공계 인재 지원받아 의사 키우는 광주영재학교

광주의 유일한 영재학교인 광주과학교육원이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광주과학교육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진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학년도 졸업생은 280명이었고, 대학 진학자 265명 중 19명(7.2%)은 이공계열이 아닌 의예·치예·수의예 등의 의학 계열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재학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다른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금기시 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돼 SKY대학 진학도 매년 증가세” 시민단체, 지정취소 검토 촉구

교육부에 따르면 2018학년도(2020년 졸업생 적용)부터 각 영재학교 모집 요강에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영재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의학계열 진학 시 추천서 작성 거부할 것 ▲의학계열 진학 시 장학금·지원금 회수 방안 등을 명시 ▲의대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등 지침을 마련했다.

광주과학교육원은 또 최근 3년간 전원 서울지역 대학 및 과학기술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위 SKY대학에 진학 비율이 2016년 27.7%, 2017년 36%, 2018년 46%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영재학교 출신자가 학벌 명망이 높은 대학에서 성공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시민모임은 “영재학교 학생의 부모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 비용을 포기하고서라도 의학 계열 진학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학계열 진학을 막으려는 교육부 지침도 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소위 명문대학 진학수단으로 전락한 영재학교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광주과학교육원의 영재학교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한편, 영재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학업성취능력이 우수한 중학교 졸업 예정자를 선점하는 ‘학생 우선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지원을 받아 장학금이 넉넉한 편이고, 대학 수준의 실험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 전국 8개교에서 790여명을 선발한다. /김종민기자

한빛원전 ‘수동 정지’에 지역 우려 확산

주민·환경단체 등 대책 촉구

한빛원전 수동 정지 사건과 관련해 안전을 우려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 전북 고장 주민·환경단체는 22일 영광 한국수력원자력 한빛

원자력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나 총리실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활동 실패와 산업부의 관리·감독 실패 등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한빛 1호기는 체르

노빌 핵사고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더 가동했고, 면허도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로 출력의 제한기준인 5%를 넘어 18%까지 급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10일이 지난 뒤에야 사용정지와 특별조사를 시행했다”며 “이는 원전의 부실운영과 위험성을 증

명하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한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 행동’은 성명을 내고 “사건·사고 때마다 소수의 담당자만 처벌받고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영무세 같은 발표가 아닌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수명이 다 된 한빛 1호기를 즉각 폐쇄하고 부실이 명백한 한빛 3·4호기도 조기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김동규기자

광주시내 다중이용시설 라돈 농도 양호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라돈(Rn)을 조사한 결과 권고기준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반 조사는 다중이용시설 57곳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실내 라돈 농도가 높다고 알려진 지하와 1층 등 저층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평균 라돈 농도는 46Bq/m³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m³)의 1/3 수준으로 양호하게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주 시험방법에 따라 라돈 검출기를 90일 동안 장기 노출시킨 후 환독해 라돈 농도를 검사한 결과로 단기 측정방법에 비해 측정결과 신뢰성과 정확성을 한층 높였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지난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따라 라돈을 검사할 계획이다. /최관범기자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복지혜택 확대

전남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학습휴가 적용 범위가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22일 열린 제33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복지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

용해 사용하던 학습휴가를 전체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 3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장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며 “자기계발의 기회를 잘 살려 교육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을 비스를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